

강원지역 언론과 회견

▶▶▶ 불법 정치자금 수사 형평성 논란

편파·표적수사 주장 억지 다른 사안 수사하다 불거진 일

그것을 경선자금 수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부정사건이나 기업 비자금 또는 어떤 부정한 뇌물이나 정치자금 제공 과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끝에 가서 경선자금에 닿아있더라 그런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 한 건 수사돼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된 일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한화갑 의원에게 또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의 도착점이 경선자금이었다는 것이지 검찰이 경선자금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고 해서 수사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편파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선자금이든 또 무슨 자금이든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라고 검찰에 명령하거나 요청한 일 없다.

은근히 희망사항을 표현한 일도 없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으며 진실이다. 하물며 편파수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경선자금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아왔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경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부득이 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고 답변해왔다. 덧붙이면 적어도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경선을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했는데 개중에는 저비용으로 치른 사람도 있고 고비용으로 경선을 치른 사람도 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나 김근태, 정동영 후보들은 다 저비용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점에 관해 수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아무런 판단을 한 일이 없고, 아직까지도 무슨 결심을 하거나 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여론과 국민적 합의를 보면서 검찰이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나 우연히 다른 사건에서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경선자금 수사가 아니라 다른 수사이고, 때로 경선자금에까지 미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건전한 합의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 정도의 유보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

▶▶▶ 재신임 · 10분의 1발언 해법

재신임 아직 철회하지 않았고 특검수사 윤곽 나올 때 밝힐 것

재신임의 문제를 쉽게 풀어버리지 않은 것은 두세가지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허물이 있는 정치인은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신임 얘기를 꺼냈다. 그때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고 또 정치적 합의는 이미 야당들이 요구를 한 바 있기 때문에(소위 재신임에 유사한 퇴진이라든지) 쉽게 수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제안한 것이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야당에서 재신임에 대해 공격했지만 철회하면 흔쾌히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고 또 다른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공격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총선과 연계하는 방법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고, 추측이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명쾌하지 않다. 국민투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듯이 총선에 연계하는 일이 바람직하느냐, 가능하냐 하는 것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특검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적어도 상당 부분 윤곽이 나와서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객관화됐을 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0분의 1 시비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수사가 다 끝나봐야 10분의 1이 넘는지 넘지 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녹비의 가로알자’ 라고 하듯이 야당이야 모든 것을 다 끌어 담아서 10분의 1을 넘었다라고 하고 싶겠지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다르지 않겠나. 그러나 이것도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비추어 10분의 1이 넘는지 여부는 수사가 끝나고 난 뒤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결코 10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 ‘국민참여 0415’ 등 어떻게 보나

자발적 정치참여 활성화해야 합법적 운동 홍위병 매도 곤란

되도록이면 법적·정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선거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지 않나. 미국의 예비선거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피켓팅하고, 인사하고, 홍보하고, 집회에 모여 기세를 돋우는 정치활동을 하는데 여기엔 당원도 있지만 일반 지지자들이 많다. 도시락 싸가지고 나온 자발적 참여자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방식이 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거나 선거를 타락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회적 폐해를 끼치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역사상 가장 저비용의 선거라고 감히 얘기한다. 대선 때마다 선거비용의 동그라미를 하나씩 줄여왔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대선이 상당히 깨끗해서 동그라미를 떼기가 어려웠어도 동그라미 하나를 뺐다라고 얘기할 만큼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냈다. 그래도 법적으로 위반한 게 있어 선거 책임자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있지만 저비용 선거인 것은 틀림없다. 대통령을 만드는 비용을 ‘원가’라고 친다면 저는 원가가 아주 적게 들어간 대통령인 것이 틀림없다. 저도 노력했지만 참여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노사모라는 조직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저비용 선거를 치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 전부 수사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짜증스럽겠지만 이 과정을 겪고 넘어가면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정치발전의 계

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렇듯 합법의 공간에서 하는 일들은 홍위병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노사모 비슷한 창사랑이라는 조직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방향이 옳다는 것을 말한다. 노사모는 성공했고, 창사랑은 성공 못한 것밖에 차이가 없다. 이런 운동이 열린우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를 개혁하자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연하자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해석을 관대하게 해서 장려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 민경찬 펀드에 대한 의견

상식밖의 일 재발 막겠다 철저조사해 낱낱히 밝힐 방침

가까운 사람의 일로 국민에게 또 하나의 의혹을 던져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참 난감하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민정수석실의 민정팀은 뭐 하느냐’고 하는데 실제로 민정팀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친인척 관리는 그 중 작은 부분에 속한다. 한 사람의 직원이 수십명의 친인척을 관리하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지 못하고 경찰의 정보팀에게 동향 좀 파악해 달라는 수준으로 동향보고를 받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한달 단위로 체크하고, 주변에서 풍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과거에는 여러 풍문이 돌아다녀도 대통령이 두려워 조사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뒤에 병을 크게 키운 사례가 있지만 지금의 민정수석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풍문이 접수돼 조사를 시작하자 기미를 느낀 민경찬 씨가 시사잡지에 인터뷰하는 바람에 제대로 조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빠르게

노출돼 버렸다. 진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식 밖의 사태인 것은 틀림없다. 보통사람이 650억원을 쉽게 모을 수 있겠나.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조사해서 있는 대로 다 밝히겠다. 조금도 숨기지 않겠다.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원칙대로 처벌하겠다.

최근 일어난 여러 일들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별로 득 본 일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민경찬 씨가 사람들을 속인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은근히 모이는 과정에서는 서로 알았고 나중에 덕 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뭉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가 은근히 힘이라도 실어주고 또 그것을 악용한 결과로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대통령 가까이 줄서 아무런 덕을 못본다는 것을 무척 강조해오고 있고, 실제로 조카들도 취직했다가 오히려 역차별 받았다는 불평을 여러 차례 듣는 등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으로 난감하다.

어떻든 이 문제는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